

## 제345호 (2012. 1. 30)

---

### ■ 경제 동향

- 2011년 해외건설 수주액 591억 달러

### ■ 정책 · 경영

-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전략적 경영 계획 수립 절실
- 2012년 전 · 월세 안정을 위한 정책 동향과 전망

### ■ 정보 마당

- 미국 CM/PM for Fee 시장 성장세 유지

### ■ 업계 · 연구원 소식

### ■ 경제 일지 / 제도 · 용어 해설

### ■ 건설 통계

### ■ 건설 논단 : SOC 투자는 지역 균형 발전의 지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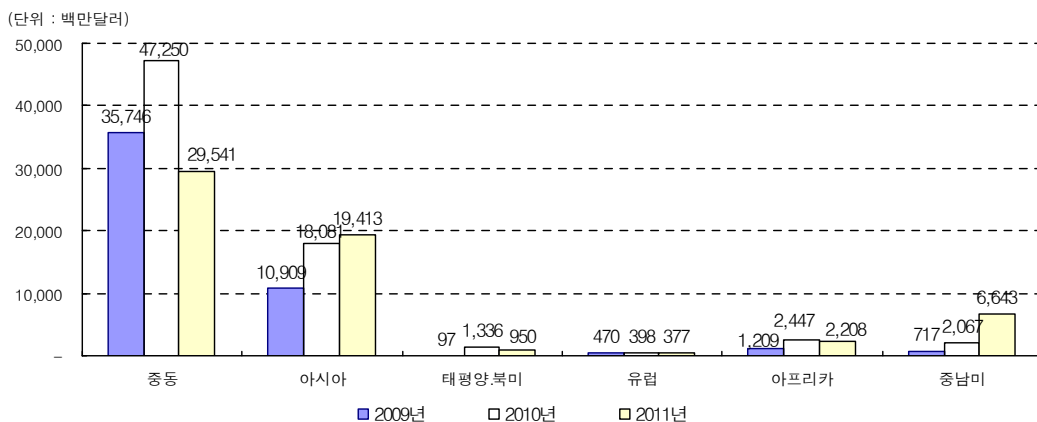
## 2011년 해외건설 수주액 591억 달러

- 중동 지역 수주 감소, 아시아·중남미 지역은 증가, 산업 설비 부문에 집중 -

### ■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 감소에도 불구하고 591억 달러 달성

- 2011년도 해외건설 수주는 2010년보다 17.4%가 감소한 591억 달러를 기록
  - 이는 716억 달러를 달성한 2010년에 비하면 부진한 실적임.
  - 그러나, 2010년에 186억 달러 규모의 UAE 원전 수주로 수주액이 급등했던 것을 감안하면, 2011년의 591억 달러 수주는 매우 양호한 금액임.
  -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 감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해 지역별 시장 다변화가 일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됨.
- 지역별 분석 결과, 편중도가 높은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는 감소한 반면,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의 수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는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의 영향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낮은 실적인 295억 달러를 기록, 2010년 대비 37.5%가 감소함.
  - 태평양·북미,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2010년보다 수주 실적이 감소하였음.
  -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토목과 건축 수주의 증가로 전년 대비 7.4%가 증가한 194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액을 달성
  - 중남미 지역에서도 43억 달러 규모의 브라질 CSP 상공정 일관제철소 수주에 힘입어 전년 대비 221.4%가 급등한 66억 달러를 기록해 역시 역대 최대액을 경신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실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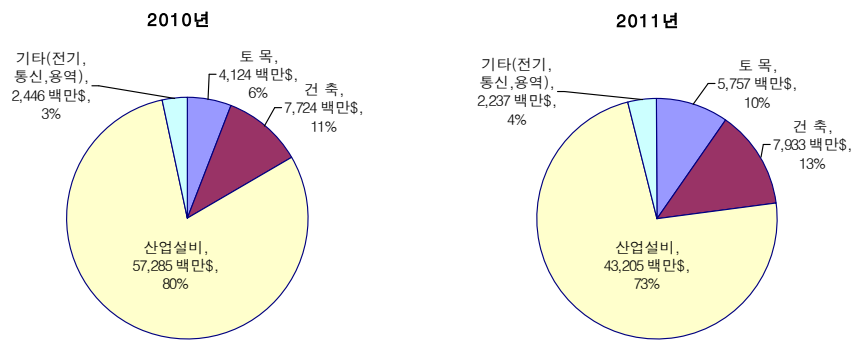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산업설비 부문에 집중, 발전소와 제철 관련 시설 및 화학공장 수주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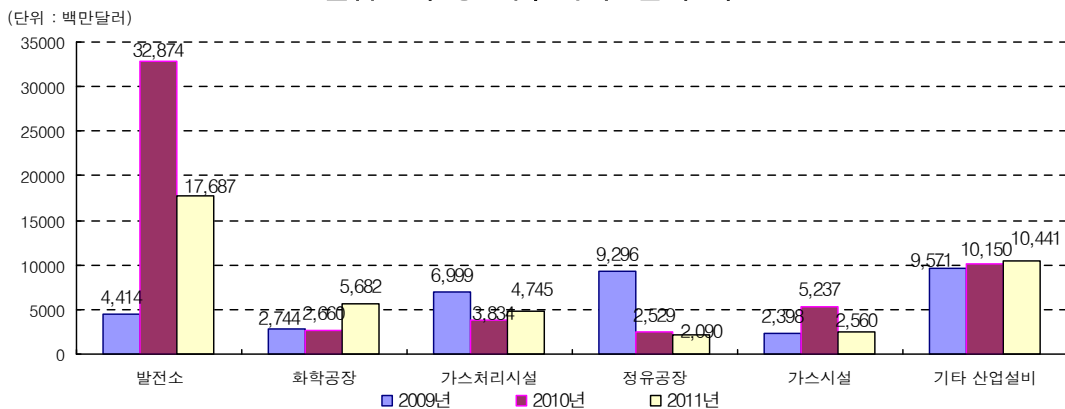
- 공종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산업설비 수주가 73%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축 부문이 13%를 점유
  - 토목 부문이 전체 수주에서 10%를, 기타(전기, 통신, 용역) 공종이 4%를 차지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실적 비교>



- 산업설비 수주를 세부 공종별로 분석한 결과, 발전소, 제철 관련 시설, 화학공장, 가스처리 시설의 순으로 수주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발전소 수주는 UAE 원전을 수주했던 2010년과 비교하면 46.2%가 급감. 그러나, 금액 자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77억 달러로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됨.
  - 화학공장 수주는 전년 대비 113.6% 급등한 5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가스처리 시설 또한 23.8%가 증가한 47억 달러로 높은 실적을 기록함.
  - 한편, 기타 산업설비는 제철 관련 수주가 63억 달러를 기록한 데 힘입어 2010년 대비 2.9%가 증가한 104억 달러를 기록, 3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산업설비 중 세부 수주 실적 비교>



박철한(연구원 · igata99@cerik.re.kr)

##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전략적 경영 계획 수립 절실

- 2012년 건설산업 주요 경영 이슈와 건설기업의 대응 방향 모색 -

### ■ 2012년 건설 경영 환경

- 유럽 재정 위기 지속 및 국내 가계 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할 전망
  -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재정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대부분 국가들에서의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3% 중후반대로 낮아질 전망
  - 대내적으로는 가계 부채 문제에 따른 소비 심리의 위축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 수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하여 성장세 하락이 불가피
- 국내 건설 경기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공공 및 민간의 건설투자 감소와 주택·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침체가 지속될 전망. 해외 건설시장에서는 중동 및 아시아의 수주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재정 위기의 여파에 따라 불안 요인도 상존
- 생산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의 불안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공사 비용 상승 등이 우려됨.
  - 건설기업의 재무 환경에 있어서는 기준금리의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에 의한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신규 PF의 어려움과 대출 금리의 상승 및 상환 압박이 예상됨.
  - 또한, 최근 지속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 잔고의 소진으로 기성 실적이 부진하여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 2012년 건설 경영의 핵심 이슈 : 안정과 내실, 위기 대응 속 기회 포착

-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불안한 건설 경영 환경으로 인하여 2012년 건설 경영의 최대 이슈는 성장보다는 안정과 내실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
  - 최근의 건설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하여 건설기업들은 무리한 신규 수주나 신규 투자성 사업의 확대보다는 기업 내부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사업과 경영 관리의 내실화에 주력할 것임.
  - 정부도 효과가 불확실한 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마련하기보다는 보수적이고 긴축적인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건설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

- 두 번째 핵심 이슈는 경영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대응 여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임.
  - 건설 경기의 침체를 지속적으로 경험해 온 건설기업들은 단기와 중장기적인 경영 환경 대응 방향과 대응 체제, 대응 수단 등의 확보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
  - 또한, 건설산업 정책도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위기 대응력 제고와 경쟁력 향상, 신사업 및 신상품 개발에 맞춰질 것임.

### ■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2012년도 경영 전략의 방향

- 2012년의 건설 경영 환경 변화와 핵심적인 경영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설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경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첫째, 2012년은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여 향후 5년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이 수립되는 시기로서, 정책 및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둘째, 건설시장의 경쟁 요소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므로 과거의 기업 경쟁 우위 요소가 향후의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될 것인지, 새롭게 등장할 경쟁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구체화해야 할 것임.
  - 셋째, 경영 관리 역량의 제고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재무, 전략, 경영 관행 등 경영 자원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와 기업 내의 사업 추진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개선책 마련에 주력해야 함.
  - 넷째, 전략적 재무 관리는 경영상의 필수 목표가 되어야 함. 부채 비율 및 차입금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 재무적 리스크 관리 및 상시적인 체크 시스템 운용, 원가 관리의 강화 및 중·단기 자재 및 장비 조달 계획 등을 모색해야 함.
- 2012년 건설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을 감안할 때, 건설기업의 올해 경영 계획은 기업 내부적인 성장 여력 기반의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할 것임.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 2012년 전 · 월세 안정을 위한 정책 동향과 전망

-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등으로 시장 안정 도모,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 뒤따라야 -

### ■ 최근 주택시장 및 정책의 동향과 전망

- 2011년 말에 발표된 12.7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매매가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반면, 전 · 월세 시장은 계절적 요인 및 신학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12년 올해는 총 · 대선을 포함한 주택시장 내 · 외 환경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입주 물량의 급감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와 시장 전반의 불안 심리가 잔존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 동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 2011년도 전 · 월세 대책의 주요 내용

- 전 · 월세 대란을 겪었던 2011년의 경우 정부 대책의 주요 핵심은 i) 임대 물량의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 ii) 급격하게 상승한 전세 자금의 원활한 조달 및 이자 부담 감소를 위한 대출 지원, iii) 매매 활성화를 통한 임대시장으로의 스펀 현상 분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 2012년 전월세 안정화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2012년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볼 수 있듯이, 올해는 ‘주택시장 안정 및 맞춤형 주거 복지 강화’의 일환으로 도시 내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와 대학생 전세 임대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전 · 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임대 물량의 공급이 주로 공공 부문에 치중되고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거래 활성화를 통한 수요층 유인 효과가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확대 위주의 단기 대책만으로는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도 주목해야 함.

<2011년에 발표된 전·월세 대책 비교>

구분	1. 13 (전월세 안정화)	2. 11 (전월세 안정 보완)	8. 18 (전월세 안정화)	12. 7 (전세 공급 확대 및 지원)
민간 임대 활성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 기금(연리 2%) 건설 자금 한시적 특별 지원	-매입 임대 사업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 지원 요건 완화	-수도권 매입 임대 세제 지원 요건 완화(3호→1호) -매입 임대 사업자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소형주택 전세 보증금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 수준 세제 및 자금 지원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제도 도입 추진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재개발 추진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향(17%→20%)	-LH 다세대주택 2만 가구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 주택 기금 지원 및 전세 임대주택 1천 가구 확대	-대학생 전세 임대 1만호 공급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임대 공급 확대(2011년 1.3만호→2012년 1.5만호)
전세자금 지원	-주택 기금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화 및 대출 지원 규모 확대(5.7조원→6.8조원)	-서민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6천만원→8천만원)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확대(8천만원→1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보증 규모 확대(2010년 5.8조원→2011년 7조원)	-전·월세 소득 공제 대상 확대(연소득 3천만원→5천만원, 1인 가구까지 확대) -전세 대출 한도 확대(5천만원→6천만원) 및 기간 연장(6년→8년)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용자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세 수요 완화		-준공 후 미분양 임대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취득 후 5년 간 양도세 50%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연 5.2%→4.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 부과 중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 확대(4천만원→5천만원, 금리 4.7%→4.2%)

- 수요 분산과 심리적인 불안감, 국내·외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이 불식되지 않을 경우 잠재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뒤따라야 함.

두성규(연구위원 · skdoo@cerik.re.kr)

## 미국 CM/PM for Fee 시장 성장세 유지

- 미 100대 CM/PM for Fee사 매출액 분석 결과,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 심화 중 -

### ■ 세계 건설시장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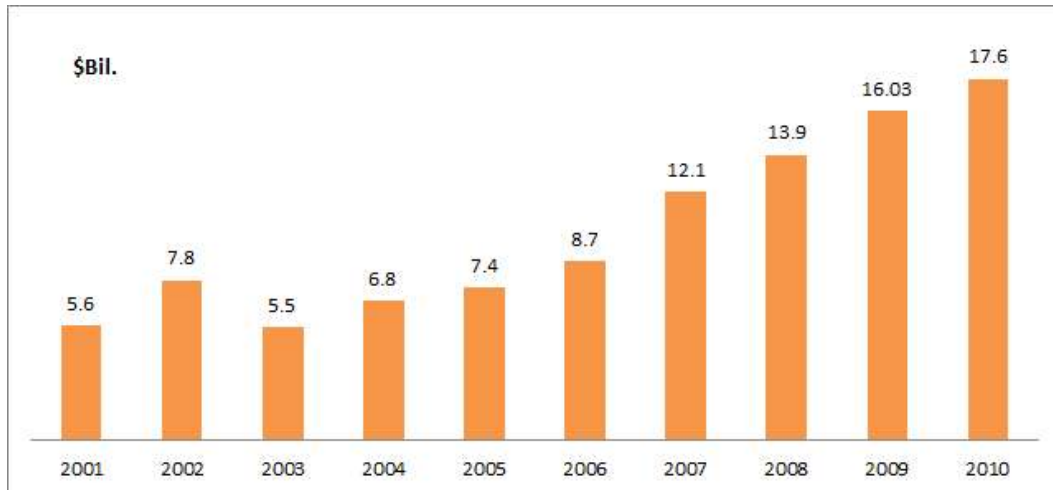
- 미국 건설시장이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CM/PM for Fee (용역형 CM/PM) 시장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ENR(Engineering News Records)지가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100대 CM-for-Fee사 및 50대 Program Management사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의 매출액 추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최근 4년 간의 성장이 매우 높게 나타남.
  - 2010년도 매출액은 175.5억 달러로 2009년의 160.3억 달러에 비교하여 9.5%가 증가함. 이는 상위 11개 회사가 연방 재정 사업 및 대형 사업 등에서 거둔 매출 성장에 기인한 것임.
  - 반면, 나머지 89개 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16.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100대 기업은 매출이 증가한 기업과 감소한 기업들로 양분되는 현상을 보임.
  - For Fee 기반의 CM/PM 회사들은 연방 재정 사업 및 대형 프로젝트 등의 감소 또는 지연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 따른 시장 경쟁 심화

- 건설 경기의 침체에 따른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으로 CM/PM for Fee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For Fee 기반의 PM/CM 전문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형 종합건설사 및 EC(Engineering Contractor) 회사들이 관련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또한, 거대 자금력을 갖춘 대형 회계 법인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음.
  - 이 밖에도 시공사 및 건축사(Architect), 개발업자 또한 CM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하강 국면에서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들은 핵심 업무 영역의 확장 및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장기 고객 확보 전략을 구사하며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음.



<미 CM for Fee & Program Management 시장 규모 추이>



자료 : “Top 100 CM-for-Fee Firms & Top 50 Program Management Firms”, ENR, 1995~2011, 매년 6월 둘째 주.

### ■ 공공 CM/PM시장에서의 장벽과 기회 : 인소싱

- CM/PM 시장에서 기반 시설 사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음. 그러나, 최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추진 사업의 지연과 법안\*통과 실패로 모멘텀을 잃고, 불확실성이 확대됨.
  - 공공 CM/PM은 여전히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능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투자 여력을 가진 기업과의 연합이 필요함.
- 한편, 발주자들이 인소싱(In-Sourcing), 즉 조직 내에 CM/PM의 기능을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이러한 경향은 공공 부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을 방지하려는 목적과 함께 아웃소싱으로 비용을 낭비한다는 비난에 대비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많은 공공 발주자들이 신규 인력의 채용 규모를 축소하면서 조직 내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퇴직하더라도 대체 인력에 대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 내부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된 한 프로젝트의 경우, 외부 기관에서 재검증한 결과 과대 예산(규모 및 공사비)이 책정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견됨.
  - 민간 CM/PM 회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향후 공공기업들의 자산(건물 등) 개선 사업이 시작되면, CM/PM 시장이 확대되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김윤주(연구원 · yjkim@cerik.re.kr)

\* 미 의회에서 ‘transportation funding bill’의 통과가 실패함으로써 주정부 및 지방정부들이 장기 프로젝트의 추진이 어려워짐.

■ 대한건설협회,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기업 경영 전략 발표회」 개최

- 목표 :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영 전략을 중소 건설업체에 전수함으로써 중소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일시 및 장소 : 2012. 1. 19(목),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발표 주제
  -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업계 대응 전략(발표자 :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
  - 각 사별 경영 전략(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 현대건설, 코트디부아르 발전소 공사 수주

- 현대건설이 아프리카 중서부의 코트디부아르에서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아지토 발전소 증설 공사를 수주
  -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코트디부아르 행정·경제의 중심지인 아비장 남서쪽에 위치한 기존 가스터빈 발전소 현장에 139MW 스팀터빈 1기를 추가하는 등 기존 발전소를 복합화력발전소로 증설하는 공사로, 아지토에너지사가 발주했으며 공기는 27개월임.

■ 삼성중공업, 호주에서 2.6조원 규모 해양 플랜트 수주

- 삼성중공업이 호주의 자원 개발 업체인 Inpex사로부터 길이 110m, 총중량 10만 톤의 세계 최대 규모 해양 가스 처리 설비(CPF, Central Processing Facility) 공사를 수주
  -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해양 가스 처리 설비 공사는 부유식 해양 생산 설비의 일종으로 유전에서 가스를 생산,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로서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예정임.

■ 포스코건설, '초고층건물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포스코건설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를 이용, 바람 등에 따른 초고층건물의 흔들림이나 비틀림 등을 계측·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 포스코건설은 이 시스템으로 지상과 건물(옥상 2대) 등에 3대의 GPS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초고층건물의 위치 변화량을 측정해 '동적 거동'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 16	한국개발연구원	▪ ‘나라경제’ 지상 좌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2012년도 주택·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 참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설 산재 예방 대행 기관 선정 관련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산재 예방 대행 기관 심의 및 선정 관련 심의 참여
	공정거래위원회	▪ 자체 규제개혁심의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참여 -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 심사
1. 17	한국산업은행	▪ 건설 경기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참여 - 최근 건설 경기 동향 및 향후 전망 관련 자문
1. 18	국토해양부	▪ 공공주택총괄과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 - 보금자리주택 관련 사업 추진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위한 법률 개정 자문
1. 19	국회	▪ 입법조사처 주최,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 2012년 주택 및 부동산시장 전망 관련 자문
	국토해양부	▪ 부동산산업과 주최, 공모형 PF사업 실무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공모형 PF 사업 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관련 자문

■ 신규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제한 입찰의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등급 제한 입찰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되나, 현재 등급 제한으로 발주되는 물량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함.</li> <li>▪ 등급 제한으로 발주시 해당 등급 내에서 실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부족하여 부득이 상위 등급 업체와 공동 도급이 많이 이뤄짐에 따라 등급 제한 입찰로 발주된 공사에서 해당 등급 업체가 수주하는 비중이 50% 수준(금액 기준)에 머물고 있음.</li> <li>▪ 등급 제한 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조달청으로 위임 발주하는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달청에서 등급 제한 입찰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를 개정하는 것이 요구됨.</li> <li>▪ 현행 등급별 공사 배정 규모가 다소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등급별 배정 공사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대신, 해당 등급 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등급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li> <li>▪ 또한, 지자체마다 등록된 업체 규모와 발주하는 공사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자체별로 등급별 경쟁 제한 기준을 각기 제정·운영하는 것이 요구됨.</li> </ul>

일자	주요 내용
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2012년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이 민간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으로 60% 내외의 수준에서 조기 집행을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li> </ul> </li> <li>▪ 고용노동부, 「2011년 12월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44만 1천명 증가. 고용률(58.5%, 전년 동월 대비 +0.5%p), 경제 활동 참가율(60.3%, 전년 동월 대비 +0.2%p), 실업률(3.0%, 전년 동월 대비 △0.5%p) 등 주요 지표가 모두 개선</li> </ul> </li> </ul>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해양부, 「국가별 글로벌 경쟁력 지표」 평가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모델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가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 그 다음은 중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9위로 나타남.</li> </ul> </li> <li>▪ 한국은행, 「2011년 12월 수출입 물가지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12월 수출 물가는 전월비 0.3%, 수입 물가는 0.2% 각각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비로는 수출 물가가 2.5%, 수입 물가가 7.1% 각각 상승. 연중으로는 수출 물가가 4.4%, 수입 물가가 13.4% 각각 상승</li> </ul> </li> <li>▪ 지식경제부,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대 그룹은 올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151조원을 투자하고 12만 3천명을 새로 채용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경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결의</li> </ul> </li> </ul>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원, 「2011년 12월 중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 및 유동성 현황」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재정 위기의 장기화 우려 등으로 외화 차입 여건이 다소 어려운 가운데 국내 은행들의 차환율은 100%를 상회하는 등 외화 차입은 비교적 원활하며, 외환 건전성 비율도 모두 지도 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li> </ul> </li> </ul>
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통상부, 한·중 FTA 전문가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와 관련 한·중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중 FTA의 경제적·전략적 함의, 절차 및 협상 전략 수립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해서 의견 청취</li> <li>※ 2012. 1. 9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추진에 공감하고, 한국의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협상을 개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음.</li> </ul> </li> </ul>
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해양부, 「2011년 12월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 9,807호로 전월 대비 2,767호 증가. 다만,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전월 대비 1,172호 감소한 3만 881호로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li> <li>-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월 대비 612호 증가한 2만 7,881호로 나타났고, 지방은 전월 대비 2,155호 증가한 4만 1,926호로 집계됨.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은 4만 286호로 전월 대비 108호 증가하였고, 85㎡ 이하도 전월 대비 2,659호 증가한 2만 9,521호로 나타남.</li> </ul> </li> <li>▪ 한국은행, 「2011년 12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과 동일, 부도업체 수는 128개로 전월(130개)에 비해 감소, 신설법인 수는 6,645개로 전월(5,432개)보다 증가</li> </ul> </li> </ul>

### <시공능력평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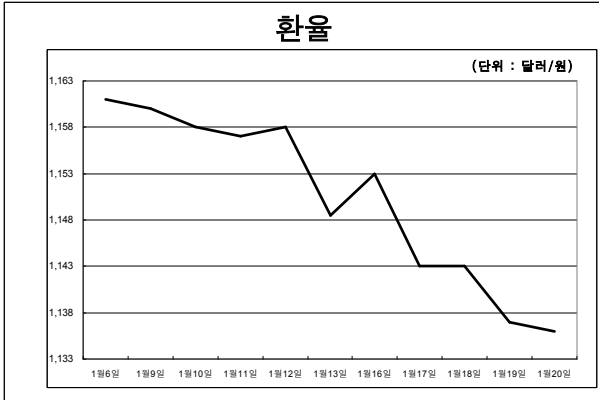
- 개요 :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 평가 기관
  - 종합건설업자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가스시설 공사업자 → 대한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공시 절차
  -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자본금, 기타 사항을 매년 2월 15일(재무제표는 4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대한건설협회 등에 위임)에 제출
  - 각 협회에서는 건설공사의 실적 검토 및 시공능력 평가
  - 각 협회에서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시, 일반의 열람을 제공하고, 등록 수첩에 기재
- 시공능력평가 공시액의 활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운용 기준, 도급하한제 적용 기준으로 활용
- 시공능력공시액 산정 방법
  - 평가 단위 : 업종별로 평가하되,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평가
  - 평가 산식

$$\text{시공능력 평가액} = \text{공사 실적 평가액} + \text{기술 능력 평가액} + \text{경영 평가액} \pm \text{신인도 평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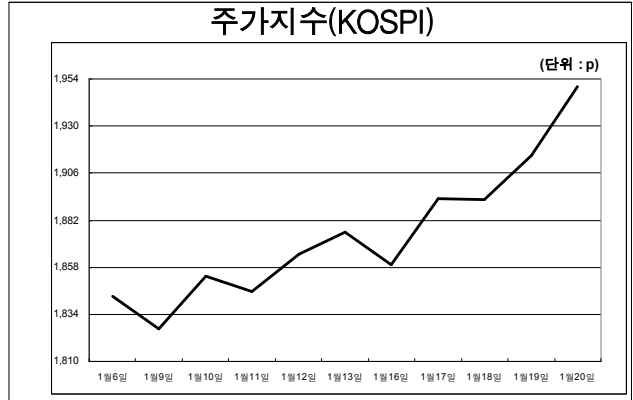
- ① 공사 실적 평가액 = 최근 3년 간 연평균 공사 실적의 75%
- ② 기술 능력 평가액 = 기술능력 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 × 보유 기술자 수 × 30/100) + 퇴직 공제 불입금 × 10 + 최근 3년 간의 기술 개발 투자액
- ③ 경영 평가액 = 실질 자본금 × 경영 평점 × 75/100
- ④ 신인도 평가액 : 신기술 지정, 우수 건설업자 지정, 협력 관계 우수자 등의 경우 3년 간 연평균 공사 실적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고, 부도, 영업 정지 처분, 재해율 불량자 등의 경우 일정 비율 감산

※ 허위 실적 신고 서류 제출시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시 최근 3년 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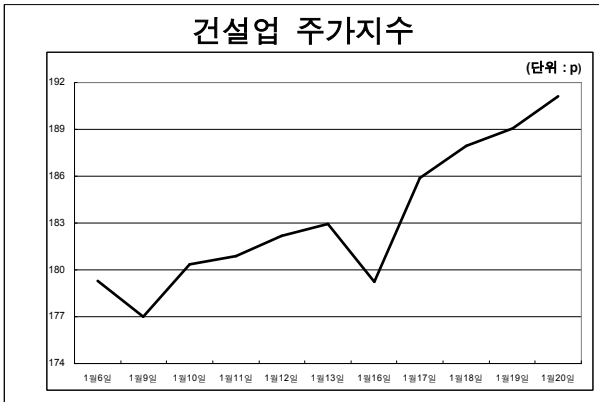
■ 주요 거시경제 지표(2012. 1.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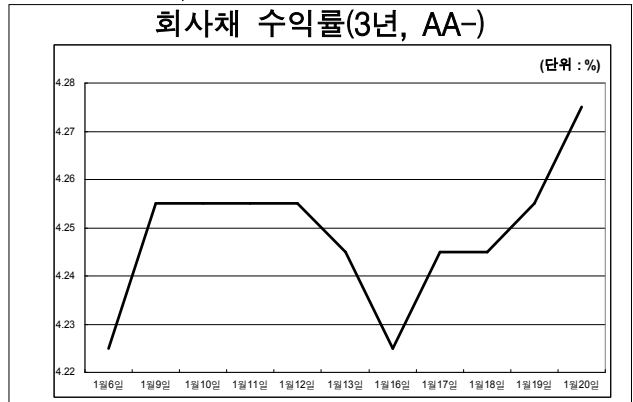
- 전주 대비 12.5원 하락



- 전주 대비 74.2p 상승



- 전주 대비 8.1p 상승



- 전주 대비 0.03%p 상승

■ 건설업체 수

(단위 : 개사)

구분	'07년 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2011년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종합건설업체	12,842	12,590	12,321	11,956	11,796	11,759	11,739	11,716	11,647	11,545
부도업체 수(누계)	120	130	87	86	31	33	39	44	51	60
전문건설업체	36,422	37,110	37,914	38,345	38,561	38,415	38,442	38,328	38,287	38,100
설비건설업체	5,478	5,768	5,994	6,151	6,334	6,348	6,347	6,342	6,342	6,330

자료 : 각 협회

■ 건설업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

구분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2011년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건설업	1,849	1,812	1,720	1,753	1,754	1,789	1,723	1,821	1,842	1,832
(비중)	7.9	7.7	7.3	7.4	7.1	7.3	7.1	7.4	7.5	7.6
제조업	4,014	3,963	3,836	4,028	4,079	4,031	4,014	4,044	4,054	4,071
(비중)	17.1	16.8	16.3	16.9	16.6	16.5	16.5	16.4	16.5	16.9
실업률	3.2	3.2	3.6	3.7	3.3	3.0	3.0	2.9	2.9	3.0

자료 : 통계청

## SOC 투자는 지역 균형 발전의 지름길

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가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 재정을 통해 경기 조절, 사회 복지, SOC 개발 등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은 대체로 유동성 확대와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교통 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SOC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향후 도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SOC 예산을 30% 정도 늘려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교육, 일반 공공행정 등 10개 사업 부문의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SOC 예산은 전년 대비 5.5% 축소되었다. 이는 국내 SOC 시설이 이미 충분하다는 판단과 함께 건설투자는 웬지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가물류비의 비중이 GDP의 15.6%로 일본 8.7%, 미국 10.1%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발전 편차는 여전히 크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SOC 시설이 필요하며, SOC 투자 없이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특히 서민들의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건설업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일용직 근로자로 대부분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인 서민들이다. 건설투자가 축소되면 하도급, 자재, 장비업 등 건설 산업의 연관 산업도 침체돼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는 줄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SOC 시설은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그 효용 가치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향유할 수 있다. 건설투자 확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SOC 예산을 감축해 스스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고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 2011. 12. 21>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